

SOCIETY

2025년 3월 10일 월요일

오늘의 날씨

예보 06:50 달맞이 14:37
개천 18:36 달림 04: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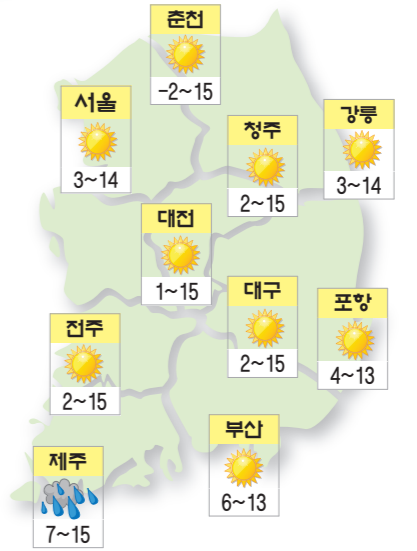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Gwangju, Mokpo, Yeosu, Suncheon, Gwangju, Gyeongsang, Jeonnam, Jeonbuk, Jeollabuk, and Jeollanam provinces.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Mokpo and Yeosu, including sunrise and sunset times.

주말 광주 도심 대규모 정전

미번거 확인하세요!
광주 도심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전력 당국이 수습에 나서.
9일 한국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40분께 광주 남구 진월동·주월동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해...



8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과 사회대개혁 정취를 위한 제17차 광주시민총결기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尹 석방에 들끓는 민심

5·18민주광장서 '제17차 광주시민총결기대회'

광주비상행동·오월단체, 검찰 규탄 등 비난 목소리
시민 1300여명 분노 표출...“민주주의 부정한 폭거”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항고 포기로,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지역 민심이 다시 들끓었다.
특히 내란사태를 계기로 윤 대통령의 구속을 이끌었던 광장은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는 격분의 목소리와 '또 다시 12·3 사태가 벌어질 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했다.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내란 동조세력 처벌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시민들은 '나만의 깃발 만들기' 부스에서 '우리는 강하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직권으로 재구속하라' 등이 적힌 깃발을 흔드는 모습도 보였다.

면하라' 등을 촉구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법원의 결정이 권력자에 대한 불처벌 조장과 사회적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는 불안감을 드러냈다. 또 '사법부가 윤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으로 일상을 되찾기를 원했던 시민들의 염원을 저버린 것이다'며 실망감을 표했다.
이외에도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광장에 나선 시민들에 대한 기만과 만행이라고 비난했다.
최정민씨(34·여)는 "헌법재판소(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할 경우 또다시 비상계엄이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에 온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한다"며 "나라의 안정을 바라는 시민 한 명 한 명의 목소리가 현재에 전해져 조속히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의 분노는 검찰로 향했다. 광주비상행동은 "즉각 항고를 포기한 데 이어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한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찰청 지휘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들은 내란이 초래한 전 국가적 위기를 심화시키며 대한민국을 벼랑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이 내란수괴의 공범이자 내란 비호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주는 것은 파면과 엄벌을 요구하는 시민과 국민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윤리 "전국의 비상행동 대표들과 함께 의논해 광주에서도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고 투쟁할 수 있는 긴급 지침을 마련하겠다"며 "위대한 시민의 힘으로 윤 대통령이 파면되고 구속되도록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월단체도 윤 대통령 석방 소식에 비판을 쏟아냈다.
5·18기념재단과 5·18공법3단체(유공자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성명을 통해 "검찰이 끝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했다. 이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며, 국민을 철저히 기만하는 반역 행위"라며 "검찰은 법과 원칙을 스스로 내던지고 권력자 보호에만 급급했다"고 전했다.
또 "이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검찰이 더 이상 국민의 기관이 아님을 증명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끝내 정의를 포기했다면, 국민이 나설 것이다"며 "우리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내란을 방조한 세력들에게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 '尹 구속취소 성명' 5·18단체 압박 논란

국가보훈부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낸 오월단체에 '정치적 중립'을 내세우며 압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보훈부가 '용산 대통령실'을 거론한 것으로 확인되는 란이 일고 있다.
9일 5·18공법3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국가보훈부는 '5·18민주단체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재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공법단체에 발송했다.
공문에서 보훈부는 공법단체의 정관에 포함된 '정치활동 등의 금지' 조항 등 관련 근거를 들며 공법단체가 발표한 성명서가 관련 법령과 정관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앞서 5·18기념재단과 공법단체는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정의에 대

한 도전'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불어 보훈부는 공문에 특정 정당에 경감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특정 공직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례를 적시하며 유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보훈부는 공문 발송 전 공법단체 관계자들에게 전화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라", "왜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나. 성명서 원본을 보내라", "윤 대통령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으니 '내란수괴'라는 표현을 옳지 않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법단체가 항의하자 보훈부는 "용산에서 난리가 났다", "용산에 보고를 해야 한다" 등의 언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늦은 밤까지 이어진 이 같은 보훈부의

전화 연락에 공법단체 직원은 압박을 받으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재혁 5·18민주공공자주총회장은 "지난 12·3사태 이후 여러 차례 성명을 발표했음에도 대응이 없던 보훈부였다. 이번 성명에 유독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모종의 이유로 단체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며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1980년 당시 트라우마를 떠오르게 한 비상계엄 행위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무슨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보훈부의 논란에 정치권에서도 강기정 광주시장은 SNS에 "보훈부가 윤석열 구속취소를 비판한 5·18단체에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공문 발송... 성명 원본 요구도
오월단체·정치권 "용산 대통령실 거론, 정치적 의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운운하며 압박했다.
그 시대착오와 판단착오가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내란수괴'를 '내란주범'이라 부르지 말라니, 우리를 조선시대 흉길동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훈부의 압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이며, 국가기관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위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18의 가치를 계승하고 있는 단체의 규탄성명 발표는 당연하다"며 "보훈부는 민주주의를 지킨 이들의 목소리를 억누를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존중하고 계승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5·18 단체에 대한 정치적 압박 행위를 즉각 중단하

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광주시의회도 "국가보훈부가 5·18단체의 정당한 비판을 문체 삼으며, 정치적 중립을 명분으로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며 "5·18 민주화운동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민주화 운동이며, 이를 기리는 단체들에 대한 탄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5·18 단체에 대한 정치적 압박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올바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국가보훈부는 설명 자료를 내고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안내 공문을 발송한 것은 관리·감독기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다"고 해명했다.
이윤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Advertisement for Baroyeon wedding services. Features a couple in white wedding attire and text: '바로연 바른 만남 바른 결혼'.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초혼·재혼 무료상담 1644-5432 / 062-381-0009'.